



News S

한·미 FTA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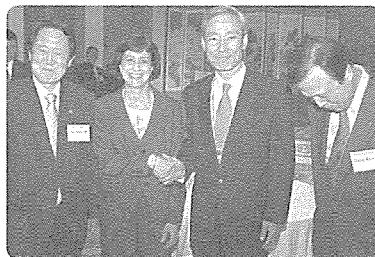


Planning special [8] 기획특집



김정주 교수
건국대학교
생명자원경제학과

1. 머리말



아픔”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축산업계는 이미 1994년 UR 타결시 쌀산업을 지키기 위해 축산분야를 점진적으로 쿼터화, 관세화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축산관련 분야는 겨우 경쟁력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한·미 FTA협상으로 인해 한국 축산업이 붕괴되지 않을까하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축산업의 피해가 불 보듯 명확한 한·미 FTA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미 FTA 체결로 우리에게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이 52%에 이른 반면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답변은 27.4%에 그쳤으며, 북핵 발언 이후 한국사회여론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40.5%에 반대 51.9%로 절반이상의 국민이 협상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농업은 UR/WTO/DDA등에서 불어오는 수입자유화의 바람 앞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농업·축산 분야에 불어 닥치는 태풍격인 한·미 FTA는 “때리는 데를 또 때리는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무역진흥을 위하여 한·미 FTA가 불가피한 선택임을 홍보하면서 국내대책으로 119조원을 통해 농업 회생에 사용하고 소비자중심의 농식품 정책기능을 강화하면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여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하고, 한·칠레 FTA 비준과정에서 도입된 FTA이행지원 기금을 한·미 FTA추진에 따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119조원은 한·칠레 FTA 체결 당시 농업에 10년간 투자하겠다는 대책이었지, 한·미 FTA에 대한 피해 대책은 아닐 뿐 아니라 정부, 특히, 농림부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신뢰가 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 한·미 FTA협상 어디까지 왔나?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세계에서 2005년까지 180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 체결을 시발로 한·싱가폴 FTA, 한·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한·ASEAN FTA를 이미 체결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인도 FTA, 한·태 FTA등이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은 한·일 FTA와 한·중 FTA 등이다.



한·미 양국은 4차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중을 탐색하는 정도의 진전에 그쳤고 5차 협상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향이 마련될 것이며, 미정(Undefined)으로 분류된 민감품목의 양허방향이 구체화될 것이다.

정부는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퀘타(TRQ), 관세 장기 철폐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감도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한국 제주도에서 있었던 4차 협상에서는 양국의 입장차이만 확인할 뿐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므로 12월에 계획된 5차 협상에서는 오히려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급진전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내 무역촉진법이 2007년 7월 말로 만료되므로 3개월 전인 2007년 4월까지 협상이 이루어지면 미국은 의회동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추진 가능할 것이므로 협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시간 계획에 맞추어야 하므로 졸속이라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3. 한·미 FTA가 타결되면 어찌될 것인가?

미국과의 FTA 체결이 농축산업계에 가져오는 피해는 연구자에 따라 최소 2조원에서 최대 8조 8천억까지 추정되었고 고용부문에서 최대 14만 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1차 피해



만을 고려한 것이며, 농업 관련 산업의 2, 3차 피해까지 고려하면 한·미 FTA가 가져오는 피해는 예측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미 FTA 피해액 규모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양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축산물 수입이 늘어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축산업 부문 손실로 이어 질 것이다. 더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양허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져 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도착가격이 없어진 관세 만큼 낮아질 것이므로 과거의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의 경우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 축산물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가격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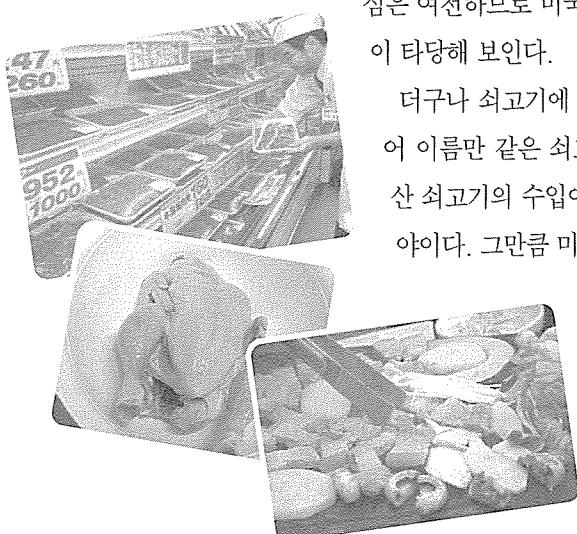
구 분	국내가격 (원 / Kg)	수입단가(cif) (원 / Kg)	양허관세 (2004)	관세부과 수입자격	수입가격 하락률
쇠고기	8,680	3,388	40	4,743	29
돼지고기	2,581	2,101	22.5	2,574	18
닭고기	2,344	1,316	18	1,553	15

구체적으로 쇠고기는 현행 관세 40%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수입가격은 29%정도 하락할 것이다. 쇠고기는 한·미 FTA와 관계없이 미국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2~3년 내로 40~50%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광우병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 이전인 2003년 한국의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점유율은 냉동 77%, 신선·내장육 71%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광우병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 해제로 빠 없는 살코기만 허용하게 되었으므로 미국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 70%대를 상회하여 상승하지는 못하고 40~50%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타당해 보인다.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소비는 2002년 8.15kg으로 정점을 이루고 계속 감소 추세이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므로 미국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 70%대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이 타당해 보인다.

더구나 쇠고기에 관한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는 차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이름만 같은 쇠고기일 뿐 상품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증가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돼지고기 닭고기 분야이다. 그만큼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대체 대상이 한우고기 아니라 돼지 및 닭고기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 재개를 통하여 3억 달러 수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산 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양허관세율이 18~22.5%이므로 수입가격은 15~18%정도 하락할 것이다. 돼지고기,



닭고기는 유럽, 태국, 중국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므로 관세가 철폐되어도 미국산 돼지고기는 크게 수출이 증가하지 못 할 것이므로 미국으로서는 별 이익이 없을 것이 확실하다. 또한, 삼겹살과 닭다리는 우리의 선호부위이지만 미국의 주된 수출 품목은 아니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면 돼지고기와 대체되어 돼지고기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중대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반면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미국 수출이 늘어날 것이므로 무역 부분의 이익도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수출로 덕을 본 부분을 바탕으로 손실 본 부분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보이는 정부의 태도에 농업부분에서는 협상을 즉시 중단하고 먼저 국내대책을 수립한 후, 협상을 하더라도 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개방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어느 정도나 시장개방에서 예외로 인정하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피해액, 교역지표, 지역집중도, 호당 재배면적, 자급률, 소득감소율 등을 지표로 하여 민감도를 계산한 결과 피해액과 교역지표를 기준한 민감도 순위 모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5위안에 들었다.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 세 가지 품목이 교역량이 늘어나 피해가 클 것임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협상자라면 가장 피해가 클 품목을 시장개방에서 예외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민감 품목으로 인정되어 개방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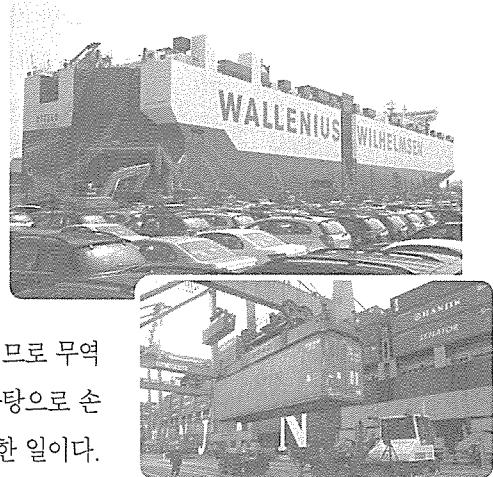


표 2. 민감도 결정 요인 종합

품목	피해액	교역지표	지역 집중도	호당 재배면적	자급률	소득 감소율
쇠고기	1	1	-	-	7	2
돼지고기	2	2	-	-	3	-
대두	3	3	12	10	8	8
보리 및 맥주보리	4	4	-	-	6	7
닭고기	5	5	-	-	5	-
사과	6	7	7	3	1	9
포도	7	8	3	6	2	6
감귤	8	6	1	2	1	4
낙농품(시유제외)	9	9	-	-	-	2
배	10	10	5	4	1	10



또 한 가지 희망이라면, 한·미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가 축산물을 개방예외품목으로 보호해 줄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TRQ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는 방식이다.

TRQ는 상품의 정해진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이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이다. 우리는 사료용 옥수수에 대하여 처음에는 TRQ 물량을 610만톤으로 정하고 이 물량에 대해서는 1.8~3.0%의 낮은 관세를 물리고 있다. 그 후 옥수수 수입물량이 610만톤이 넘을 것이 예상되어 옥수수 TRQ 물량을 추가로 430만톤을 0~2.0% 관세 조건으로 늘렸다. 그래서 우리의 옥수수 TRQ 물량은 도합 1,040만톤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860만톤의 옥수수를 수입하므로 전량 0~3.0%의 매우 낮은 관세를 물고 수입하고 있다. 만일 추가로 늘린 430만톤의 TQR를 포기한다면 250만톤의 옥수수는 328%의 높은 관세를 물고 수입해야 한다.

이때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산 옥수수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하면 자동적으로 250만톤의 옥수수는 미국 아니고는 세계 어느 나라도 수출할 수가 없게 되어 미국으로서는 3억 2천만달러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쇠고기 수출을 중대한 이익과 비슷한 액수이다. 따라서 미국으로 하여금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무조건 관세 0% 대상으로 물어붙이는 것 보다 선별적으로 옥수수를 통하여 우리는 손해 볼일 없이 미국의 이익을 챙겨주면 된다.

4. 맷는말

정부는 한·미 FTA를 기정사실로 정해 놓고 강하게 물어붙이고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도 사생결단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미 FTA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는 하나의 정치적 접근방안으로 보고 계속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여 한·미 FTA를 유보하고 “선 대책, 후 협정”의 축산인의 목소리를 내야함은 당연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죽겠다! 죽겠다!” 하다가 진짜 죽을병이 들어버리면 더 큰일이다. 정치는 정치대로 진행시키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 ⑤

